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한국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으나, 북한 변화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제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이 출발해야 한다.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핵심적 근간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결합으로서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의 부재,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판단 기준 부재, 예산제약 기능 미흡, 국가의 과도한 할당, 원자재 공급의 절대부족, 정보의 은폐·독점·왜곡 등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하고 결여될 수밖에 없는 ‘부족의 경제’이자 공모와 담합 그리고 사적연계구조에 의존하는 ‘배급과 협상의 경제’이다.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비효율과 부패의 경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외부의 지원이 투입되더라도 북한 경제의 회생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전면적인 전환 없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

향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 경제의 복구와 성장 지원이라는 요원하면서도 비현실적인 목표 대신,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유도 및 촉진하는 한편 남북통합 및 통일한국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1. 문제 제기
 - 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 한계 노정
 - 나. 북한 체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의 재설정
2.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
 - 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지배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
 - 나. 不足(부족)의 경제
 - 다. 배급과 협상 그리고 부패의 정치경제
 - 라. 자기회복 메커니즘의 결여
 - 마.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로: 성장과 쇠퇴 그리고 몰락
3. 북한 개혁·개방 전망
4.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 가. 북한 정치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명확한 인식
 - 나.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 지지세력 육성
 - 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포용 및 한국사회 동경 유도
 - 라. 남북통합 및 통일한국의 기반 조성

1. 문제 제기

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 한계 노정

- 한국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으나, 북한을 변화시킴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포용정책에 기초를 둔 한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부차원에서는 금강산 관광 개시, 개성공단 운영, 경의선·동해선 남북 개통, 인도적 지원 등을 전개하였으며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 등은 인도적 지원, 지역개발협력, 북한 내 투자 및 남북교역을 전개하였음.¹⁾
 -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북한의 경제는 여전히 중국과 국제기구 등 외부의 지원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
 - 또한 북한은 핵개발을 고수하면서 3대 세습을 진행하고 있고 2010년 3월의 천안함 피습 침몰과 11월의 북한 해안포 연평도 포격에서 볼 수 있듯이, 대남 호전성을 버리지 않고 있음.

나. 북한 체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의 재설정

- 한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제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이 출발해야 함.
 -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구조적 모순은 무엇인가? 1950년대와 60년대의 북한 경제성장과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쇠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북한의 개혁·개방은 과연 가능한가? 우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등이 본 글의 주요 관심사임.
- 북한 체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북한 체제에 있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알려줌으로써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고 한국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데에 필수적임.
- 이에 따라, 본 글은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에 대한 규명,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전망,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함.

2.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

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지배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

-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핵심적 근간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부정형적 결합임(‘Fusion of State and Economy’ and ‘Fusion of State and Society’).
- 북한은 공산주의 원칙에 따라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를 직접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면서 물자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를 책임지는 체제임.
- 북한은 또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최고수뇌부로 하는 조선노동당만이 역사와 미래에 대한 유일한 해석권자임을 내세우면서 국가가 북한사회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집단과 개인의 개별적인 이익과 견해 표출은 주체사상과 당 그리고 수령절대주의의 이름으로 억누르는 체제임.
- 그러므로, 북한의 경제는 정치화되어 있고, 정치는 탈정치화되어 있음(economy is politicized and politics is de-politicized).

나. 부족(부족)의 경제

- 북한의 경제는 국가의 통제와 관리 이외에는 별도의 ‘재화배분 시스템(system of equity)’이 존재하지 않음. 즉, 자본주의 경제처럼 정치적 관여로부터 탈피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재화배분 시스템이 부재함.
- 재화배분 시스템이 없는 경제는 재화배분 자체가 정치화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재화를 원하는 집단들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이에 따른 총체적 혼란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재화배분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막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배분기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음.
- 재화배분 시스템이 부재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재화가 풍부하다면 분쟁과 혼란은 줄어들 수 있고, 배분기구의 억압성과 독재성도 일부 감소할 수 있음.
-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그 본질과 속성상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하고 결여될 수밖에 없는 ‘부족의 경제(the Economy of Shortage)’임.

북한의 경제는 정치화되어 있고, 정치는 탈정치화되어 있음. 또한 국가의 통제와 관리 이외에는 별도의 ‘재화배분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재화배분 시스템’이 없는 경제는 재화배분 자체가 정치화될 수밖에 없음

북한경제가 ‘부족의 경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사회주의 경제의 속성인 ‘연성 예산제약’과 ‘국가의 과도한 생산목표 할당 계획’의 특성 때문임

- 북한 경제가 ‘부족의 자기순환적 악순환(self-generating vicious circle of shortage)’을 특성으로 하는 ‘부족의 경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속성인 ‘연성 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과 ‘국가의 과도한 생산목표 할당계획(taut planning of central government)’에 기인함.
- 시장경제하에서는 모든 기업들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야 함은 물론 기업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이윤 창출을 필요로 하기에 항상 예산상의 제약을 받으며 이에 따라 경영효율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에서는 기업이나 공장 등은 형식적으로는 예산이 수립되지만 할당된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예산초과가 허용되고 있음.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예산제약의 압박을 강하게 받지 않는 이들 국가기업들은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이유가 없음.
-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market and price mechanism)’이 부재하기에 기업이나 공장의 효율성·비효율성을 판별할 수 없음. 기업과 공장은 시장경제에서와는 달리 비경쟁적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과 공장의 생존은 경영효율성의 증대나 시장에서의 성공에 기인하기보다는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국가와의 협상 능력과 기술’에 따라 결정됨.
- 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라는 체제상 국가가 국민들에게 완전 고용과 일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기에 기업과 공장의 생존이 시장경제에 비해 훨씬 용이함. 이는 예산제약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파산(bankruptcy)이 시장경제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한 반면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매우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임.
-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의 연성 예산제약은 기업과 공장으로 하여금 ‘원자재에 대한 끝없는 요구와 과도한 재워두기 행태(insatiable demand for and excessive hoarding of materials)’를 유발하고 촉진시킴.
 - 기업과 공장은 예산 제약의 강한 압박이 없기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최대한으로 요구하며, 또 현재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원자재를 많이 확보해 두고자 함. 즉, 기업과 공장은 현재의 수급 수준과 필요성에 관계없이 항상 원자재에 대한 부족감을 떨치지 못함.
 - 기업과 공장이 이처럼 원자재에 대한 끝없는 요구와 과도한 재워두기 경향을 보이는 것은, 원자재가 제품의 생산에만 필요한 것이 아

나라 국가기관이나 다른 생산 집단과의 관계에서 주요한 협상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향후의 원자재 수급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예기치 않은 추가 과업지시에 대한 대비 등을 위해서도 원자재의 다량 축적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음.

- 원자재에 대한 기업과 공장의 무한대적 요구와 축적 행태는 다른 생산 집단과의 악순환적인 상호상승작용을 일으켜, 북한 사회주의경제 전체의 만성적 부족 상황을 야기함.

- 국가의 과도한 생산목표 할당계획 역시 북한 경제가 ‘부족의 경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임.
 - 북한 경제는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이 부재하기에 기업과 공장의 나태함을 끌어내고 낮은 생산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생산 집단에 과도한 생산량을 부과하는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음. 즉, 국가는 매우 높은 목표생산량을 할당함으로써 각 생산 집단으로부터 최대한의 열성과 노력을 촉구하고 끌어내고자 함.
 - 그러나, 국가가 부과하는 목표생산량은 현존하는 자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이고 또 경제 내부논리상으로도 일관성을 가질 수 없음. 결국, 국가의 과도한 생산목표 할당계획은 각 생산단위와 주체들에게 비현실적인 생산목표량을 부과하고 이에 기반을 둔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북한 경제에 또 다른 병목(bottleneck)과 부족(shortage)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 북한 사회주의 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부족의 재생산(reproduction of shortage)’ 문제는 국가가 재화의 부존 및 분포 현황과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총체적이고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치유되고 교정될 수 있으나, 매우 초보적이고 원시적인 경제가 아닌 한 이는 불가능한 희망사항임.
 - 산업화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해진 현대 경제에 있어서 국가가 가격기제의 도움 없이 경제 전반에 대해 총체적이고 완벽한 정보를 보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결국, 국가는 하부조직과 생산담당자들로부터 올라오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북한 또한 일정 수준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라고 전제할 때, 북한 당국 또는 경제 총괄책임자가 북한 경제를 계획, 운영, 지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하급기관과 여타의 생산주체들이 전달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 경제에서 정보는 상당부분 은폐되거나 왜곡

북한의 과도한 생산목표 할당계획은 각 생산단위와 주체들에게 비현실적인 생산목표량을 부과하고, 이에 기반을 둔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북한 경제에 또 다른 병목과 부족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부족, 배급, 협상을
특징으로 하기에,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사적연계구조'가
형성 및 확산되고 이에
따른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임**

되고 있음. '정보의 은폐와 왜곡(withholding and distortion of information)'은 하급기관 또는 생산담당자가 원자재의 배분과 할당량의 부과를 둘러싸고 국가와 협상을 벌일 때 매우 중요한 협상무기가 되기 때문임. 즉, 하급기관과 생산담당자는 정보를 은폐하고 왜곡하여 가능한 한 원자재를 최대로 확보하는 한편 자기들에게 부과되는 생산목표 할당량은 최소화함으로써 쉽사리 목표량을 초과달성하고자 함. 도덕적 해이와 실적 부풀리기는 만연할 수밖에 없음.

- 결국, 정보의 은폐와 왜곡은 북한 계획경제의 운영과 효과성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면서, 기존의 재화 부족 상황을 악화시키며,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킴.

다. 배급과 협상 그리고 부패의 정치경제

- 북한 경제에서 재화의 배분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기에 북한 경제는 논리적으로 배급의 경제임. 또한, 북한경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재화분배 시스템이 없기에, 배급의 결과는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됨.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이처럼 부족(shortage), 배급(rationing), 협상(bargaining)을 특징으로 하기에,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사적연계구조(patron-client relationship)'가 형성 및 확산되고 이에 따른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임.
- 북한 경제에서 재화의 확보는 배급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책임자와의 사적 네트워크 구축 여부에 달려있음. 즉, 배급 담당기관 또는 담당자와 사적인 연계가 구축되어 있을 경우 배급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그렇지 못할 경우 배급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거나 또는 아예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후견인과 피후견인 또는 배급자와 피배급자 간의 사적 네트워크에서는 상호간의 뇌물 주고받기가 네트워크 유지의 토대가 되며, 이 과정에서 공공의 목표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으로 대두됨. 재화의 배분은 기업과 공장의 효율성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재화배분 담당자에 대한 사적 충성도에 달려있게 되며 재화배분의 기준은 자의적으로 정해지고 정해진 기준 또한 수시로 변경되고 왜곡됨.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하급기관 및 지방행정 기관의 자의적 행정 행태는 증가하고 확산됨.
- 북한의 배급경제는 또한 현재의 배급 시스템을 온존시키는 것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는 수많은 이익집단을 창출하고 양산함. 이들 이익

집단들은 비록 현재의 배급 시스템이 매우 비효율적이지만 그만큼 사적 이익을 추구할 공간은 크고 넓기 때문에,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을 지지하며 현상의 변경에 대해서는 저항세력으로 기능함.

- 정보의 은폐와 왜곡, 사적연계구조의 확산과 부패의 만연, 자의적인 배급 시스템, 이익집단의 기득권 유지 행태 등은 북한 당국의 경제기획 및 관리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게 되며 중국에 가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능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결국 북한 정치경제의 최종 종착지는 ‘총체적 부패(total corruption)’와 ‘심각한 비효율성(high inefficiency)’이 될 수밖에 없음.

라. 자기회복 메커니즘의 결여

- 북한 정치경제의 부패와 비효율성은 자체적으로 치유하거나 교정하기가 매우 어려움. 이는 북한 체제 자체가 부패와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회복 메커니즘(mechanism of self-recuperation)’의 생성기반을 근원적으로 파괴하고 잘라냈기 때문임.
-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사회주의는 기업과 공장, 생산라인, 투자계획 등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또는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결여하고 있음.
 - 즉,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의 파괴와 부재는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구분 기준과 수단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사회·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사회주의는 체제의 단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요청하는 ‘목소리(voice)’를 결여하고 있음.
 - 건설적 비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political society)’가 선행적으로 존재해야 함. 그러나 북한은 제도적으로 정치적 사회를 뿌리부터 숙아내고 그 자리에 관제 사회를 심어 놓았음.
 - 북한 사회주의는 유일하게 수령만이 당과 국가의 이름을 빌려 정치적 진리(political truth)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음. 북한의 영도론에 따르면 수령은 ‘사회역사발전의 유일한 동력’으로 되어 있고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권자’로 표기되어 있음. 북한은 수령 그리고 당과 국가의 해석에 대한 그 어떠한 비판도 법·제도적으로

북한 정치경제의 부패와 비효율성을 자체적으로 치유하거나 교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자기회복 메커니즘’의 생성기반을 근원적으로 파괴하고 잘라냈기 때문임

**북한 정치경제의
지속성과 자기회복성을
위한 마지막 보루는
당과 당원이나,
이들 또한 수령
절대주의 하에서
자율성이 결여되고
부패와 비효율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음**

탄압하고 사회적으로는 반동(reactinary)으로 낙인찍고 있음. 이러한 체제에서 정치적 사회는 존재할 수 없으며 체제의 자기회복을 위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더욱 나올 수가 없음.

- 정치적 사회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관제 사회는 외형적으로는 당과 국가에의 절대적인 충성과 추종을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당료 및 관료들과의 암묵적 동맹(tacit alliance)을 맺고 이들과 더불어 북한 사회 전반에 사적연계(clientelism)와 부패(corruption)의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결국, 북한 정치경제의 지속성과 자기회복성을 위한 마지막 보루는 당과 당원이나, 이들 또한 수령 절대주의 하에서 자율성이 결여되고 부패와 비효율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음.
-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주체이자 지도계급은 조선노동당과 당원임. 따라서 당과 당원의 청렴성과 기강 유지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데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임.
- 일반적으로 혁명 초기 그리고 당의 최고 권력자가 당과 당료들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을 경우, 당의 기율은 어느 정도 그리고 일정기간 확보되고 지속될 수 있음.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어 혁명의 열기가 사라지고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등 여타의 사정으로 최고권력자의 지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도가 저하될 경우, 당과 당원들의 행태는 사회의 다른 계급들과 마찬가지로 ‘집단행동의 논리(logic of collective action)’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오늘날 북한의 당과 당원들도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일 수는 없음. 북한의 당과 당원들은 경제관료, 고위군부와 더불어 북한의 특권계급(nomenklatura)으로 변모하였으며 부패를 유발하는 사적연계구조의 최상층부에 자리 잡으면서 현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는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 중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음. 당과 당원들은 자원배분에 있어 자신들의 영향력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현 체제를 선호 및 고수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침해될 소지가 있는 정책변경이나 정책수정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북한사회 전체의 이익이고 북한 경제의 회생에 도움이 될지라도 직·간접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저항함. 즉, 이제 북한의 당과 당원들이 대변하는 이익은 북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 자신만의 이익임.

마.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로: 성장과 쇠퇴 그리고 몰락

- 북한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쇠락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음. 그렇다면 북한이 1950년대와 60년대에 보여준 경제성장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드러나기 시작한 급격한 쇠퇴와 몰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즉,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로는 무엇인가?
-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Peter Murrell과 Mancur Olson이 제기한 ‘역진화론적 또는 쇠퇴론적 시각(a devolutionist perspective)’이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음.²⁾ Murrell과 Olson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의 역진화 또는 쇠퇴는 ‘전체적 이익(encompassing interest)’과 ‘협소적 이익(parochial interest)’간의 충돌, 전자의 후자에 대한 일시적 지배, 그리고 후자의 전자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로 설명할 수 있음.
 -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 초기에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혁명지도자가 하부의 조직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이끌게 됨. 이에 따라 하부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 지역적, 부분적 이해관계는 억눌려지면서 전체적 이익이 협소적 이익을 지배하게 됨. 아울러 이 시기는 사회전체가 혁명의 열기와 신사회 건설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혁명 지도자의 강력한 지도력이 발휘되기가 용이한 환경을 제공함.
 -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제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혁명 초기의 열기가 사라지게 되면, 조직 하부의 협소적 이익들이 점차 발흥하면서 중국적으로는 전체적 이익을 누르고 국가와 사회 전체에 주도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됨. 이제 국가와 사회는 협소적 이익의 네트워크에 함몰되어 사회 전체가 ‘제도적인 동맹경화증(institutional sclerosis)’을 앓으면서 경제에서는 정체와 쇠퇴가, 정치에서는 연고주의와 부패가 만연해짐. 동맹경화증의 최종 종착지는 사회주의 국가의 쇠락과 해체 그리고 붕괴 또는 체제변환임.
-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장과 쇠퇴 그리고 몰락의 경로 또한 상기의 분석틀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그리고 이어진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기를 거치면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이 북한 사회 전체를 장악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음. 김일성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장과 쇠퇴 그리고
몰락의 경로는
‘역진화론적 또는
쇠퇴론적 시각’의
분석틀에서 이해할 수
있음**

**김일성이 내세운
북한의 발전이라는
전체적 이익은 김일성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 이익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부 조직의 협소적
이익은 늘려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만큼
사적연계구조와
부패사슬은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려웠음**

은 사회주의 공화국의 건설과 북한 경제와 산업의 재건이라는 전체적 이익(encompassing interest)을 내세우면서 북한사회의 모든 노동력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렸으며, 혁명 열기와 전후복구 의지로 가득 찬 북한 사회는 이에 호응하였음. 북한의 계획경제가 앞서 논의했듯이 정보의 왜곡과 인센티브의 결여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김일성은 강력한 지도력, 당 기율 강화, 주기적인 숙청, 부처 간·생산집단 간 경쟁심 고취와 상호 견제, 천리마 운동 전개, 노력영웅 만들기 등의 여러 수단을 발판으로 계획경제의 모순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면서 북한 경제를 단기간 내에 회복시키고 성장을 이끌어 냈음.

- 물론, 김일성이 내세운 북한의 발전이라는 전체적 이익은 김일성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 이익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북한의 최고책임자로서 북한 경제의 발전은 김일성 개인의 안정적이고도 장기적인 집권을 가능케 하며 북한 경제의 몰락은 김일성 개인의 몰락과 숙청을 의미하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하부 조직의 협소적 이익(parochial interest)은 늘려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만큼 사적연계구조와 부패사슬은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려웠음.

○ 한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 경제체제를 불문하고, 어느 사회든 경제발전 또는 산업화 초기에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경향을 보임. 즉, Paul Krugman이 지적했듯이 사회의 유희인력(여자, 노인, 실업자)과 미개발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단기간 내에 압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음.³⁾ 그러나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자원이라는 물질 투입요소의 증가 외에 과학기술(science & technology), 경영기법(management skill), 효율성(efficiency) 등의 2차적 요소가 함께 투입되어야 함.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려움. 소련 등 동구권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 초기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다가 곧 이어 정체 및 쇠퇴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북한 또한 초기의 경제성장은 상당부분 유희인력과 미개발자원의 활용이라는 투입요소의 증대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 그러나, 북한 체제가 안정화됨에 따라 그동안 억눌려 있던 편협적 이익들이 하부조직과 일선 생산집단들로부터 분출되는 것은 필연적임. Mancur Olson은 어느 사회이든 체제와 환경이 안정화됨에 따라 전체적 이익을 제치고 자신들의 편협적 이익을 달성코자 하는 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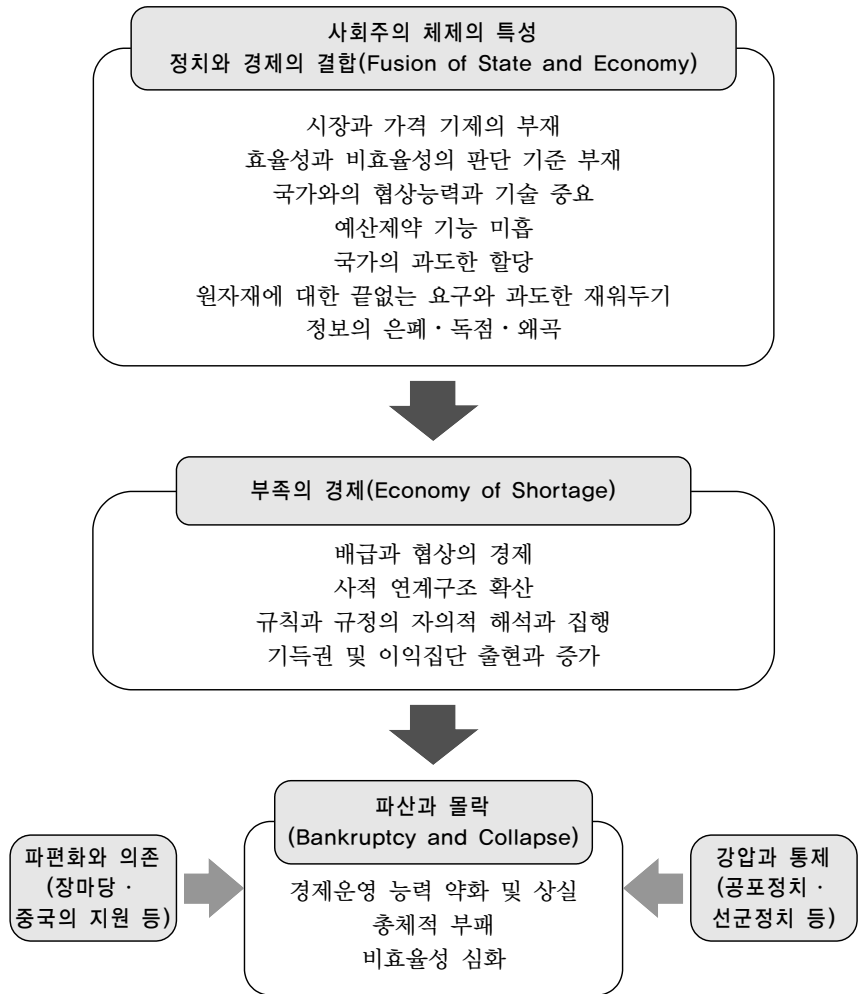
과 공모 그리고 여타의 집단행동들이 사회 곳곳에서 필연적으로 증대한다고 지적하였음.⁴⁾ 결탁과 공모 그리고 여타의 집단행동들은 시장경제의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훨씬 용이하고 훨씬 만연함.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시장과 가격이라는 정보의 유통장치가 부재하기에 일선 행정 및 생산단위에서의 정보의 은폐, 독점, 왜곡이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임.

- 북한 또한 당의 하부조직과 각급 단체의 구성원들이 상호 결탁과 공모를 통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개별적 이익을 확보하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태를 드러내고 있음. 물론, 정보의 은폐, 독점, 왜곡이 결탁과 공모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였음. 북한 사회에서 편협적 이익의 창궐과 만연은 당 최고지도부가 전체적 이익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 커다란 장애로 대두되었음.
 - 북한 당국은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부의 검열·감시 기능 강화, 당 기율 강화, 수시 숙청과 공개 총살, 수용소 감금, 김일성·김정일의 현지도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코자 하고 있으나, 앞서 논의한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속성상 북한 사회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은 사적연계와 부패의 네트워크를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함.
 - 북한은 이미 1970년대 후반 들어 내부적으로는 편협적 이익이 전체적 이익을 포획하였으며 북한 경제는 각 부패 네트워크의 사적 이익이 공공의 이익을 지배하면서 총체적인 쇠퇴와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였음. 북한의 주요 교역·지원 국가들인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건재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국제적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해지기 이전인 1980년대 초중반에 북한경제가 이미 정체상태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내부적 모순만으로도 북한은 쇠퇴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함.
-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향후의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지금의 경제도 유지할 수 없음.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열의와 자발적 노력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배급능력은 크게 약화되었음. 오늘날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은 북한 인민들에 대한 통제와 순응성 강요를 위한 공포정치·선군정치와 중국의 경제적 지원임. 이제 북한은 체제 내부적 요인만으로도 파산(bankruptcy)과 붕괴(collapse)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음.
- 북한 당국은 최근 들어 화폐개혁 실시와 장마당 통제 등을 통해 계획경제의 강화와 국가배급시스템의 복원을 도모하고 있음. 즉, 느슨

**북한 사회에서
편협적 이익의 창궐과
만연은 당 최고지도부가
전체적 이익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 커다란
장애로 대두되었음**

해진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임. 그러나 이는 ‘과거로의 회귀’이자 ‘구조적 모순의 연장과 증폭’에 다름 아님. 북한이 과거로 돌아가 기존의 체제에 매달릴수록 북한의 미래는 그만큼 암울할 수밖에 없음.

〈그림 1〉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



3. 북한 개혁·개방 전망

-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현재의 생존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폐쇄적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의 도입과 국제경제로의 편입을 적극 추진해야 함. 북한은 아울러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남과 북의 평화적 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함.
 -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한 미래는 없다는 인식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개혁·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북한 경제 관료와 지식인들이 동의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60여 년간의 국가목표와 통치논리, 그리고 남북 경쟁관계와 한국의 존재로 인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 변환을 추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 북한은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가 국가목표이며 지금도 그 목표는 유효함.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라는 국가목표를 명분으로 북한 주민들의 복종과 희생을 강요해 왔음. 북한이 이 목표를 포기할 경우 북한 정권의 존립근거와 통치기반은 사라짐.
 - 한국과의 공존은 북한의 한반도 통일 역량회복을 위한 전술적 지연일 뿐이며, 북한은 또 그렇게 내세울 수밖에 없음. 북한은 2000년의 6.15 남북정상회담도 남북 평화공존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에 방점을 두고 북한주민들에게 홍보하였음. 즉, 남북은 통일의 과정에 있다는 것임. 북한은 한국과 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주민들 앞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북한은 또한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개혁·개방이 불가능한 국가임.
 - 개혁·개방은 외부세계의 실상과 북한의 현실을 대비시키면서 북한이 ‘지상낙원(heaven's paradise)’이 아니라 ‘빈곤국가(poor state)’임을 모든 주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임.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한 가감 없는 정보 유입은 북한 전체의 국민적 사기와 북한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것임.
 - 북한은 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경제발전이 매우 어려운 국가임.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은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중국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한 미래는 없다는 인식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개혁·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북한 경제 관료와 지식인들이 동의하고 있음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계획경제에
대한 신봉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존재 때문임**

과 베트남의 선화, 쿠바의 고백으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임.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개혁·개방과 맞물리기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없는 정책방향임. 결국 북한은 폐쇄경제 하의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에너지와 식량을 중국, 한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와 지원에 의존하면서 한해 한해를 버티어 내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음.

-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계획경제에 대한 신봉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존재 때문임.
 -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는 순간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반쪽이자 구원대상이라고 믿어왔던 한국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북한 체제붕괴의 시작일 것임. 그러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포기하면 경제회생은 불가능함.
 - 이제 북한은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선언할 수도 또 안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음.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선언하는 경우, 북한정권은 주민 복종과 희생을 강요하던 통치기제와 존립근거를 상실함. 그러나 한국을 별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한반도는 반드시 통일되어 남북한이 합쳐져야 한다면, 북한은 한국에 의한 흡수통합이라는 운명에 처하게 됨. 소위 ‘남북의 평화공존’은 북한의 국가존재 이유와 남북의 현격한 경제력 격차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실제로 북한의 체제와 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한국의 존재 그 자체임. 휴전선 남쪽에 같은 민족으로서 두 배 이상의 인구와 세계 경제 15위권의 부유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게는 가장 강력한 위협요인이자 공포가 아닐 수 없음. 북한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체제내부의 모순과 비효율로 스스로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음. 결국 한국의 북한 흡수통일은 시간의 문제일 뿐 점차 필연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도 이 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생존전략은 첫째, 핵무기 보유와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을 바탕으로 국가생존을 도모하는 것이고 둘째,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확대함으로써 한국이 내부적 이념분쟁을 통해 자체적으로 붕괴하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셋째, 중국 등 우방국가들에 기대어 연명하면서 국제정세의 우호적 변화를 기다리는 것임.

-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체제와 정권의 절대적 위기에 처했을 때 무리수를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파국적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임.

4.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가. 북한 정치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명확한 인식

-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부족과 결핍 그리고 비효율과 부패의 경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현재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외부의 지원이 투입되더라도 북한 경제의 회생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음.
-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을 감안할 때 실현성과 지속성을 결여하고 있음. 대대적인 지원은 투입요소의 증대라는 차원에서 북한 경제에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증장기적 경제발전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외부의 대대적 지원은 결국에 가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임.
- 북한과의 전면적인 경제협력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음. 자본주의 국가들의 시장논리와 북한의 계획경제 논리는 상충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쌍방 모두가 합의하거나 만족할 수 있는 경제협력 결과가 도출되기 어려움. 경제논리, 법, 제도, 관행, 운영 시스템의 상이성으로 인해 전면적인 경제협력은 중도에 중단되거나 보류될 수밖에 없음.
- 물론,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단순 임가공 교역(예: 개성공단), 북한 지하자원과 원자재의 수입, 관광지 운영(예: 금강산, 개성) 등의 분야에서는 경제협력이 가능함. 그러나 이러한 분야들은 북한 내부경제와의 산업연관성이 크게 떨어지며 이에 따라 북한 체제 변환을 위한 촉진 기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북한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역외 파급성과 자체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한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추진해온 지역개발 사업, 농어촌 현대화 사업, 생산시설 설립지원 사업 등은 해당 지역에서는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부족과 결핍 그리고 비효율과 부패의 경제로서 현재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외부의 지원이 투입되더라도 북한 경제의 회생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음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북한 경제의
복구와 성장지원 대신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유도 및 촉진하는
한편 남북통합 및
통일한국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음. 그러나 이들 사업은 기술과 운영방법 등 무형의 재화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성과가 타 지역으로 파급되지 못할 뿐더러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원자재(유리, 비닐, 농기구 부품, 비료, 종묘, 공장 설비부품, 공장 자재와 원료, 에너지 등) 공급 없이는 자체적으로도 지속될 수 없음.

- 즉, 이들 사업의 대상지역들은 북한 경제와 사회에서 ‘쇼 케이스(show cases)’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고립된 섬(isolated islands)’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나마 한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영양분 공급이라는 탯줄 없이는 사업성과의 지속성과 자체적 재생산도 기대할 수 없음. 탯줄이 제거되는 순간 이들 지역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부족과 결핍 그리고 비효율의 북한 정치경제 구조에 다시 매몰될 수밖에 없음.
- 결국,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전면적인 변환 없이는 북한 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 경제의 복구와 성장 지원이라는 요원하면서도 비현실적인 목표 대신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유도 및 촉진하는 한편 남북통합 및 통일한국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나.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 지지세력 육성

-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 개혁·개방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세력을 육성해야 함. 북한의 현 정권은 정권의 태생과 속성상 스스로는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없음. 따라서 북한 사회 내부의 압박을 통한 체제 변환이 전략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음.
-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 지지세력 육성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업의 외형적·물질적·가시적 성과보다는 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인력(담당 당료와 관료, 농장 및 공장의 책임자와 실무진, 북한 주민과 노동자 등)의 정신과 사고를 바꾸어 놓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즉, 가능한 한 다수의 참여와 다수의 회동을 유도하여 이들 참여자들이 해당 사업에 따르는 선진 기술과 운영기법의 습득 외에 시장 경제와 효율성,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 정세와 한국의 발전상 등의 가치와 주제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과 성공에 자신들의 경력과 일자리 그리고 개인적 미래를 거는 중상위층의 북한 당료와 관료들을 두텁게 하고 이들이 북한내의 개혁·개방 지지세력으로 변모 및 응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및 관리해야 함.
-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의 사고 전환과 개혁·개방 세력으로서의 유도 및 육성이라는 내면적 성과가 사업 추진과 평가의 중요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포용 및 한국사회 동경 유도

- 북한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필수적임. 특히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임. 한반도 통일은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선택할 문제임. 북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시도할 수도 없음.
-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포용 및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심 유발을 주요 기능 중의 하나로 설정해야 함. 즉,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정보의 적극적 유통을 통한 한국사회 알리기를 추진해야 함.
 - 영양결핍 영·유아 등 북한 소외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은 남북한의 정치적·군사적 당면관계에 종속됨이 없이 보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북한 정권에 대한 봉쇄와 압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북한 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한국의 대북 공세가 북한 주민들이 아닌 북한의 현 정권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야 함.
 - 그러나, 북한 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관례인 강력한 모니터링을 반드시 수반해야 함. 즉,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 군대 또는 여타의 집단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감시·감독과 사후 확인 보장을 인도적 지원의 강제적·필수적 요건으로 삼아야 함. 아울러 인도적 지원의 주체가 한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물품은 대한민국 또는 한국사회가 공급자임을 알릴 수 있는 마크가 부착되어야 함.
 - 한편, ‘북한 정보자유화 사업’ 등을 전개하여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

북한의 현 정권은 정권의 태생과 속성상 스스로는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없음. 따라서 북한 사회 내부의 압박을 통한 체제 변혁이 전략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고 북한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필수적임

남북교류협력사업의**궁극적인 목표는****남북한 양 사회의****이질성에 대한 분석과****그 해결방안에 대한****연구와 대책 마련이****남북교류협력사업의****중요 사업 분야로****설정되어야 함**

게 한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야 함. 학술 교류, 문화·예술 교류, 스포츠 교류, 청소년 교류 등의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요청 및 확대하는 한편, 북한 TV·라디오의 송수신 방식(PAL)에 맞추어 방송물을 제작·송신하며 비디오 테이프와 CD 등의 대량 보급을 통해 한국 사회의 문화와 모습을 전파해야 함.

라. 남북통합 및 통일한국의 기반 조성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분단 관리가 아니라 남북통합과 통일한국의 기반 조성임. 따라서 남북한 양 사회의 이질성에 대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요 사업 분야로 설정되어야 함.
 - 한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하에 60여 년 이상 별개의 국가로 존재해 왔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이질적 요소가 매우 높음. 남북 간의 이질성 해소와 사회 통합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핵심적 과제임. 그러나 한국과 북한 간의 현격한 국력 격차를 감안할 때, 한반도의 통일은 표면상으로는 합의에 의한 통일 형식을 취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 통일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북한 사회의 이질적 요소들을 찾아내어 이를 한국 사회 기준에 부합하도록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함.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과의 접촉기회를 활용하여 북한 사회의 제 분야에 대한 현황과 실태 그리고 현장에서의 상황 등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질성 해소와 남북통합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또한, 통일 한국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법과 제도의 개선 및 보완 방안을 수립해 두어야 함.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김석범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김동성

現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후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저서로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구축방향”,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등이 있음.

주석

- 1) 한국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인도적 지원으로 2조 8,313억 원(정부: 2조 746억 원, 민간: 7,567억 원)을 북한에 투입하였으며 남북교역액은 101억 6,7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통일부 홈페이지 자료마당(통계자료), 2010년 11월 27일 검색).
- 2) Peter Murrell and Mancur Olson(1991), “The Devolution of Centrally Planned Econom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5: 239-265.
- 3) Paul Krugman(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73(6): 62-78.
- 4) Mancur Olson(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